보존·개발·이용 조화 관건…지역 구성원간 합의 '숙제'

■주제발표 1 '자연환경 보전 위한 정책적 관리방안' 조계중 순천대 교수

"세계유산 지정 위해 현상태 보존 중요"

조계중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무등산 포럼'에서 '무등산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무등산이 세계적인 국립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광주시가 추진중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인공시설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우선 정상의 군부대와 산 곳곳에 설치된 송전탑부터 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세계적인 추세가 국립공원 내에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이라면서 "미래의 후손에게도 현 무등산을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탐방객과 관련, "국립공원은 탐방객 수에 연연하면 안된다.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해야한다"며 "세계 유명 국립공원 중에선 하루 방문객을 최소 몇십명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하루 빨리 사유지를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수는 "무등산처럼 국립공원 내 사유지가 70%를 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사유지를 줄이고, 국가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 직접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국립(國立)공원을 국가(國家)공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립이란 뜻은 국가에서 세운 것을 말하는 데, 공원은 세운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조 교수는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국립이란 말을 쓰게 됐는데, 중국이나 대만 등은 국가공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㉛ 전문가 진단

■주제발표 2 '중장기 관리전략' 안시영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시민 편의 위한 체류·체험 시설 필요"

안시영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20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무등산 포럼'에서 '무등산국립공원의 중장기 관리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한 공원자원 보전 ▲행복한 생태복지 실현 ▲국민중심의 현장강화 ▲함께가는 파트너십 구축 등 무등산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안 소장은 "무등산 공원내 자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중간집계 결과, 62종의 희귀 야생 동·식물이 발견되면서 무등산의 가치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안 소장은 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탐방객이 크게 늘면서 자원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증심사 지구로 집중되는 탐방객을 분산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복한 생태복지 실현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체류·체험형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주차장과 야영장 등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소장은 무등산의 자원 보전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목표로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이전과 무등산 정상부 방송·통신시설 이전 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이들 시설물의 해결을 위해 '무등산 정상부 경관 및 자연환경 복원과 원효사시설지구 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고도 밝혔다.

안 소장은 특히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 "지역협력위원회, 지역주민 채용, 국립공원 시민대학 운영, 명품마을 만들기, 생태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라면서 "무등산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협력해 가꿔나가야할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종합토론 요약

광주시산악연맹과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일보 공동 주최로 지난 20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제1회 무등산국립공원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조계중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와 안시영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이 무등산의 보전 등을 놓고 주제 발표를 했다.

또 임형칠〈사진〉 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조오섭 광주시의원, 김동수 광주시공원녹지과장, 정후식 광주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무등산국립공원,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 1년을 기념해 마련된 포럼 내용을 요약한다.

광주시 산악연맹과 광주·전남 녹색연합, 광주일보 공동 주최로 지난 20일 광주 무등파크 호텔에서 열린 무등산국립공원포럼에서 광주시와 학계, 시민사회, 환경단체, 산악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 대표 공원…보존 중심 논의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무등산 국립공원의 핵심은 첫 번째가 보존이다. 보존이 우선된 이후 개발과 이용(주민 편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무등산이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존과 개발, 이용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사실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당시 광주시민의 질문 대부분이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였다. 또 어떤 분은 입장료를 받느냐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민 상당수가 국립공원 지정과 지역 이익을 연계해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라하면 보존 부분을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지역민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만큼 애용하기보다는 자제했으면 한다. 체력 강화 차원의 산행이라면 동네 주변 산을 이용했으면 한다.

특히 이번 포럼처럼 시민단체 중심의 모임에서는 보존 중심의 논의를 했으면 한다.

탐방객 이용실태조사 선행돼야

▲정후식 광주일보 편집부국장=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무등산 보호 운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상 군부대 이전, 방송·통신시설 통합, 사유지 매입 등 정책적 합의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부터 등산로 정비, 자연환경 보존, 탐방 편의 제고를 통한 생태복지 향상과 품격있는 공원환경 조성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얼마나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가느냐다. 생태환경의 절대적 보존이냐 보전과 이용의 조화냐의 문제는 앞으로 지역민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할 화두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원의 자연환경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탐방객 수를 포함한 정확한 이용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탐방 시설도 필요하다고 본다. 야영장이나 오토캠핑장이 대표적이다.

가족 단위로, 3대가 함께 어울리며 체험학습까지 즐길 수 있는 야영활동은 청소년에게 호연지기는 물론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산교육이 될 것이다.

기초적인 산행예절과 등산지식을 습득시킬 수 있는 교육관이나 산악문화관, 굳이 산을 오르지 않고 평지에서도 산행의 오름짓을 만끽할 수 있는 스포츠클라이밍을 위한 인공암벽장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

문제는 이들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무등산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조오섭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원장=시민 대표인 만큼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무등산 정상 '천지인' 삼봉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매년 4차례씩만 개방되는 데, 상시적으로 개방돼야 한다. 당연히 정상의 군 부대도 옮겨야 한다.

두 번째는 무등산 곳곳에 있는 방송·통신탑 6기를 한 곳으로 합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이해 당사자들간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하루빨리 흉물들을 치워야 한다.

세 번째는 원효사 지구 정비다. 증심사쪽은 이미 많이 변했다. 막걸리를 마시던 식당들이 모두 정비됐다. 이제는 원효사 지구가 그렇게 돼야 한다. 무등산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 도청의 문화전당, 광주교도소 이전 자리, 5·18 국립묘지, 가사문화권 자리, 무등산 자락 풍암정 자리 등을 광주를 대표하는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

기관·시민·언론 힘 모아야

▲김동수 광주시 공원녹지과장=행정적인 부분만 거론하겠다. 우선 무등산 발전을 위해 광주시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가고는 있느냐, 광주시가 전남도를 배제하고 있지 않느냐는 등의 말이 있는 데 이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무등산의 지정 과정을 보면 광주·전남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불협화음은 말이 안 된다.

무등산이 어떻게 국립공원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광주시민과 시민단체, 전남도민, 특히 광주시가 무등산을 아끼는 마음이 타지역보다 남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8년 변산반도·월출산 이후 24년 만에,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실제 광주시는 그동안 무등산 보존과 정비를 위해 자치단체로는 생각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764억을 들여서 증심사 지구 정비를 했고, 원효사 지구도 일부 정비했다. 특히 무등산 정상의 대대급 군부대를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립공원 지정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무등산을 시민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그리고 세계인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가지질공원에 이어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유산 지정까지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와 전남도, 화순, 담양,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이 함께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번 포럼을 통해 다시 한번 지역사회가 단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끝〉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